

‘돈봉투 의혹’ 고개숙인 이재명...“송영길 조기귀국 요청”

“국민께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
비명계 선제적 조치 요구 목소리
송 전 대표 “조만간 입장 밝히겠다”
국힘 “전·현 더블 리스크”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사과 뜻과 함께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 것은 최근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직면한 몰발 약재에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을 향한 도덕적 공세가 커지면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전당대회’ 또는 ‘금권 선거’라고 총공세에 나선 상황이며 당내에서조차 이번 의혹을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진상 확인이 먼저’라는 식의 대응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 대표가 먼저 사과에 나선 것이라는 게 대체적 해석이다. 당 지도부는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장시간 회의 끝에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조기 귀국을 요청한 것도 이 대표의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돈 봉투 사건과 관련된 당내 인사들을 총선 공천 배제 등 일벌백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조만간 귀국 문제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해온 송 전 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와 어젯 밤 통화하면서 이 대표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내 입장에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처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부패 정당’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에게 진 빚이 없다면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해야 마땅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전당대회에서도 돈 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돈 봉투 살포 사건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란 적면하장 정치공세도, 개인적 일탈이란 변명도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따가운 여론에 예타 완화법 처리 연기...“추가 논의”

‘재정준칙’ 논의도 지지부진

기재위원장·여야 간사 유럽 출장

여야가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 작업도 함께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영석(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

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한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사업비가 1000억원을 넘지 않는 사업은 예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예타 면제 기준 조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예타 기준 완화가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

다는 비판이 커져 관련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의 안건에 올라오지 못했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건전성 강화 수칙인데, 야당 반대로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기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 등은 오는 18~27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나기로 했다.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한일, 5년만에 ‘2+2’ 외교안보대화 재가동

외교·국방 국장급, 북핵 등 논의

한일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가 서울에서 5년 만에 재개됐다.

양국은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대표를 맡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약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

했다.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한일간 안보협력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 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뤄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평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지난해 말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민주 원내대표 조기 경선...28일 선출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 선거일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매년 5월 둘째 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튿날인 이달 28일로 선출일자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어 개최 일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변재일 의원이 맡았다.

현재 3선 박광온·홍익표·이원욱, 재선 김두관

의원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또 가칭 ‘더 블루 스피커’로 이름 붙인 청년 대변인 2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 공천 관련 특별당규에 대해서 이달 22일 당무위를 거쳐 5월 3~4일 이를 동안 전체 관리당원 투표에 부칠 예정이라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또 내달 8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중앙위 의장에 변재일 의원, 부의장에 어기구 의원을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태우기 절대 금지

X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병해충 방제 효과 전혀 없음

X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고춧대 등 부산물 파쇄처리

X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산자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불발견시, 도 산불상황실(286-7541), 시·군 산림부서, 스마트산림재해앱, 119 신고